

↑ 코스피 2629.44 (+37.58)	↑ 코스닥 845.82 (+3.91)
↑ 금리 (연 9%) 3.512 (+0.044)	↓ 환율 (원/달러) 1379.20 (-3.00)

‘분양가 너무해’  
서울서 ‘줍줍 물량’  
무더기 등장  
02



개그맨 황현희(왼쪽부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사기 기승

# 석달새 1200억 피해 빅테크社, 공조 시급

#. 얼마전 정년퇴임한 B씨는 구글 웹페이지에서 발송인 유재석이 최소 1000만 원을 투자해 하루에 20% 수익을 얻었다는 배너 광고를 보고 퇴직금 일부인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였다. B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IP와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가해자를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가짜 광고 색출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 사칭’ 피해, 누적 1조 이상 정부, 불법광고 등 현혹 주의 당부 메타, 가짜·사기광고 대처 미온적 유사모, 계정정지 등 강력조치 촉구

22일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범조계는 유명인 사칭 범죄 피해액은 누적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사칭 피해가 극성을 부리면 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들도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고수의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

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행위 확인·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라인 상의 각종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박명진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담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피해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온라인 피해 상담창구다.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사이버금융범죄, 권리침해(허위리뷰·초상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한 메타의 미온적인 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연예인, 경제전문가 등 유명인 사칭 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 특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는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거대 플랫폼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메타 플랫폼에서는 유명인 사칭·사기 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구글과 메타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달 고객지원 홈페이지의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사칭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수업 거부’ 의대생들, ‘반수’길 오른다

의대 중도 탈락생 73%가 ‘지방권’ 정원 늘리자 ‘상위권대’ 입시 도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상위권 의대로 재진학을 노리며 반수하는 의대 휴학생들이 이미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 및 지역인재전형이 확대해 전국 의대 입학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권 의대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상위권 의대를 향해 이탈한 자리를 메꾸는 ‘의대 편입학’ 여석도 올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입시계에 따르면, 동맹 휴학에 따라 ‘반수’하는 의대생이 이전보다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한 학원 관계자는 “몇 년 사이 불고있는 의대 돌풍에 더해, 최근 비수도권 의대에 이미 들어간 학생들마저 수도권대학 의대 진학을 노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기존에도 의대생들이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를 치르는 사례는 매년 있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 의대 중도 탈락생 203명 중 73.4%에 해당하는 149명이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보다 상위권 의대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이같은 사례가 큰폭으로 늘

것이라는 게 입시계 중론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 의대생 사이에서 내년에는 현재 재학 중인 의대보다 상위권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권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와 같이 보다 합격선이 높은 의대로 진학을 계획한다는 의미다. 다만, 의대생들이 입시 학원을 등록할 때 자신의 현재 소속을 굳이 밝히지 않아 그 규모를 집계할 수 없다.

이처럼 N수생에 더해 기존 의대생의 의대 입시 도전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hnj@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 尹, 비서실장에 정진석... ‘첫 정치인’ 발탁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내정 야, 정 내정자 ‘친윤색깔’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또 이날 오후엔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정치인 비서실장’과 ‘기업인 출신 정무수석’의 발탁은 그간 여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정진석 의원과 함께 등장해 정진석 의원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비서실장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협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은 정진석 내정자가 처음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이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들이었다.

이는 그간 ‘정책통’을 발탁했던 것과 달리 여야 협치, 대국민 소통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영수회담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임명을 발표하고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책은 좁혀져 있다”며 향후 국정방향을 소통 강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임무가 대국민 소통, 여야 협치라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다시 내려와, 함께 온 홍철호 전 의원을 새로운 정무수석으로 소개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한 여론 일부와 야권에서는 정진석 내정자의 ‘친윤’(친윤석열) 색깔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정 내정자를 ‘친윤 핵심’으로 지칭하며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 총리에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 안정” 당부  
▲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고개 숙인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선자들 (사진 뉴스1)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56%... ‘더 내고 그대로’ 42.6%  
▲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5월 국회서 폐지하라”... 여야에 공문



▲ 여 원외위원장들 “당대표 선거 ‘국민 50%·당원 50%’ 반영하라”  
▲ 조정식 “22대 국회의장, 명심은 나... 거부권 제한 180석으로 조정” (사진 뉴스1)